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우선순위

서문희 연구위원
최혜선 연구원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조사 결과, 우선과제는 부모 지원, 교사 등 인력 지원, 공공보육시설, 특수보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66개 세부과제 중 필요성이 높은 상위 10%인 11개 과제는 양육수당, 출산수당,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보육인력 근속수당 지원,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공립시설 환경개선, 공립시설 확충,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하나로 양육수당과 출산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자녀 · 다문화 · 입양가족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정책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유아 양육지원은 규모나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설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을 중심으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보육지원 이외에 다양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복시킬 수 있는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 예산 이외에 각 시 · 도나 시 · 군 ·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유의 다양한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특수시책 예산은 약 65억 5천만원으로, 국고 지원사업비의 약 15%가 된다. 이 비용 역시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로 차이가 크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특수시책 예산규모가 다르고, 특수보육시책의 종류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특수보육시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보육비용 지원,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이 있다.

시 · 군 · 구의 다양한 특수보육시책사업은 중앙 및 시 · 도 시책과의 중복성과 지역별 격차가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수많은 정책 중에 일부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흡수하여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곤 한다. 이에, 16개 시 · 도와 232개 시 · 군 · 구 각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특수보육시책 현황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 예산 이외에 각 시 · 도나 시 · 군 · 구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수사업 소요예산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시 · 도 사업비 4,835억원, 시 · 군 · 구 사업비 1,713억원이다. 이는 각각 국고 사업비의 11.3%, 4.0%로 모두 15.3%이다(표 1 참조). 국고사업 예산 대비 특수사업 비용 비율은 2008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이나 그 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1]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확충에 따라 지방정부 분담금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표 1 〉 연도별 국고 및 시 · 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 · 도 특별사업비 (B)	시 · 군 · 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 · 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 · 군 · 구특별 사업비(C/A)
2005년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2010년	4,288,978	483,527	171,298	4,943,803	11.3	4.0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 · 도 특별사업비는 시 · 도 특별사업의 시 · 도 및 시 · 군 · 구 예산이며, 시 · 군 · 구 사업비는 시 · 군 · 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자료: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표 2 〉 시 · 도별 국고 및 시 · 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0

단위: 백만원(%)

구분	재원			계
	중앙	시 · 도	시 · 군 · 구	
국고지원사업	2,066,483	1,111,248	1,111,247	4,288,978
시 · 도 사업	-	241,764	241,763	483,527
시 · 군 · 구 사업	-	-	171,298	171,298
계	2,066,483	1,353,012	1,524,308	4,943,803
(비율)	41.8	27.4	30.8	100.0

1) 2003년과 2004년에는 20% 이상이었음.

3. 특수보육시책 우선순위

시군구의 다양한 특수보육시책사업은 중앙 및 시도 시책과의 중복성과 지역별 격차가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많은 정책 중에서 일부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흡수하여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순위는 먼저 8개 영역에 대하여 필요성을 조사한 후에 다시 각 영역별로 8~10개 각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에 영역별 또는 각 영역의 세부사업별 1순위 시책을 하나 고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필요성 조사는 4점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고, 각 영역의 세부사업의 필요성 조사는 각 세부사업의 필요성에 세부사업이 포함된 영역의 필요성 점수로 조정하여 전체적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표 3 〉 영역별 특수시책 필요성과 필요성 4점 척도와 시도별 우선순위 백분율

단위: 점, %(명)

구분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 추가	부모 보육료 추가	평가인증 통과 시설	취약보육 운영 추가	출산 및 양육 수당	계	(수)
필요성 4점 척도	2.57	2.44	2.87	2.69	2.80	2.76	2.87	3.08	-	-
(표준편차)	(0.81)	(0.70)	(0.74)	(0.72)	(0.80)	(0.74)	(0.71)	(0.77)		
우선순위 백분률										
전체	12.2	2.2	21.7	5.2	14.8	5.7	10.0	28.3	100.0	(230)
서울	16.2	5.4	27.0	2.7	16.2	5.4	8.1	18.9	100.0	(37)
부산	20.0	6.7	20.0	13.3	6.7	6.7	-	26.7	100.0	(15)
대구	12.5	-	25.0	-	25.0	25.0	-	12.5	100.0	(8)
인천	18.2	-	36.4	9.1	-	-	18.2	18.2	100.0	(11)
광주	14.3	-	28.6	-	-	-	14.3	42.9	100.0	(7)
대전	40.0	-	60.0	-	-	-	-	-	100.0	(5)
울산	-	-	33.3	-	-	16.7	-	50.0	100.0	(6)
경기	5.4	2.7	13.5	10.8	16.2	5.4	18.9	27.0	100.0	(37)
강원	27.8	5.6	11.1	11.1	5.6	-	16.7	22.2	100.0	(18)
충북	7.7	-	23.1	-	30.8	-	-	38.5	100.0	(13)
충남	6.3	-	12.5	-	6.3	12.5	6.3	56.3	100.0	(16)
전북	-	-	33.3	11.1	-	-	11.1	44.4	100.0	(9)
전남	33.3	-	-	-	22.2	-	11.1	33.3	100.0	(9)
경북	5.6	-	16.7	-	27.8	5.6	11.1	33.3	100.0	(18)
경남	-	-	22.2	5.6	33.3	11.1	5.6	22.2	100.0	(18)
제주	-	-	66.7	-	-	-	33.3	-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가. 영역별 우선순위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 추가 사업, 부모 보육료 추가 지원, 평가인증 통과 시설 지원, 취약보육 운영 추가 지원,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의 8개 영역 특수시책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8개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특수보육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점 척도로 2.44~3.08점 사이에 분포하여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 경향을 나타냈다. 최저 점수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고 최고 점수는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이며 그 다음이 종사자 지원, 취약보육 지원이다. 우선순위를 보면,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28.3%,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21.7%, 부모 보육료 추가지원 14.8%,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12.2%, 취약보육 운영비 추가지원 10.0% 순이다. 이외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추가 사업은 5%대이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2.2%만이 선택하였다(표 3 참조).

나. 세부사업 우선순위

영역별 세부사업 우선순위는 〈표 3〉에 나타난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영역별로 세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세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시된 영역별 필요성 점수를 적용하여 전체적인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1)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세부사업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세부사업으로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필요성은 양육수당이 3.14점이고, 출산수당이 2.94점이다. 여기에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우선순위 점수를 적용하면 각각 2.26점, 2.42점으로 조정된다(표 4 참조).

시도별로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양육수당이 다소 높다.

〈 표 4 〉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세부사업 필요성 4점 척도와 우선순위 백분율

단위: 점, %(명)

구분	필요성		우선순위 백분율
	평균	조정점수	
출산수당	2.94	2.26	46.6
양육수당	3.14	2.42	53.4
계(수)	-	-	100.0(2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2)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세부사업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관련 사업이다. 〈표 5〉는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중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 명절휴가비 지원, 근속수당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교재연구비 지원, 교육 및 연수비 지원, 기타 역량개발 지원, 기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 조사 결과이다.

세부 사업의 필요성 점수는 4점 만점에 2.39점에서 3.09점 사이에 분포한다.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은 근속수당이고, 점수가 가장 낮은 세부사업은 중식비 지원이다. 이 점수에 종사자 지원 영역 점수를 적용하면 필요성 조정점수는 1.71~2.21점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세부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하나만 고르도록 질문한 결과는 1위가 종사자 근속수당 지원으로 48.5%이고, 다음이 기타 종사자 처우 개선 15.9%, 교육 및 연수비 지원 12.9%이다. 이들 사업은 필요성 조사에서도 조정점수가 각각 2점 수준이었다.

3) 보육비용 지원 세부사업

보육료 지원은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입소료 지원, 현장학습비 지원, 특기활동비 지원의 8개 세부사업을 조사하였다(표 6 참조).

그 결과 세부사업의 필요성 점수는 4점 만점에 2.29점에서 3.22점 사이에 분포하는데 세부사업이 3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3점 이상으로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비의 3개 세부사업이며, 두 번째는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2.70점이며,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입소료 지원, 현장학습비 지원, 특기활동비 지원으로 모두 2.3점 미만이다. 영역별 점수로 가중치를 주어 조정하면 필요성은 1.60~2.25점 사이로 조정된다.

이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세부사업을 하나 고르도록 한 조사에서도 1위는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50.4%이고 2위는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18.1%이며 3위는 민간 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4위는 입양아 보육료 지원으로 분석되었다. 시도별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4)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들은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중 공인 민간시설 인건비 지원(서울형, 부산형 등),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담임수당 지원, 특수근무 교사 지원,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 (해당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무원 인건비 지원,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중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 알아보았다(표 7 참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점 척도로 2.11~2.94점 사이에 분포한다. 최저 점수는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고 최고 점수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며 다음으로 높은 점수는 특수근무 교사 지원이다. 여기에 인건비 지원의 우선순위 점수를 적용하면 최고 1.89점으로 전체 점수는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2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공인 민간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24.1%이며 교사 담임수당, 특수교사 지원이 각각 15.8%, 11.8%이었다.

〈 표 5 〉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세부사업 필요성 4점 척도와 우선순위 백분율

단위: 점, %(명)

구분	중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근속 수당	자기 계발비	교재 연구비	교육 및 연수비	기타 역량 개발	기타 종사자 처우 개선	계	(수)
필요성											
평균	2.39	2.48	2.76	3.09	2.53	2.46	2.78	2.41	2.83	-	-
조정점수	1.71	1.78	1.98	2.22	1.82	1.77	1.99	1.73	2.03	-	-
우선순위 백분율	2.6	5.2	7.7	48.5	3.9	2.1	12.9	1.3	15.9	100.0	(2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 표 6 〉 보육비용 지원 사업 필요성 4점 척도와 우선순위 백분율

단위: 점, %(명)

구분	다자녀 보육료 추가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입양 아동 보육료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입소료	현장 학습비	특기 활동비	계	(수)
필요성									
평균	3.22	3.00	3.07	2.70	2.29	2.28	2.29	-	-
조정점수	2.25	2.10	2.15	1.89	1.60	1.60	1.60	-	-
우선순위 백분율	50.4	18.1	8.0	12.4	4.4	2.2	4.4	100.0	(2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 표 7 〉 보육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필요성 4점 척도와 우선순위 백분율

단위: 점, %(명)

구분	공인 민간시설 인건비	대체 교사 인건비	교사 담임 수당	특수 근무 교사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기타 종사자 인건비	계	(수)
필요성										
평균	2.63	2.94	2.54	2.74	2.45	2.61	2.24	2.11	-	-
조정점수	1.69	1.89	1.63	1.76	1.57	1.68	1.44	1.36	-	-
우선순위 백분율	24.1	29.8	15.8	11.8	5.7	6.1	4.4	2.2	100.0	(2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5) 취약보육 운영 지원

취약보육 운영지원은 장애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 영아전담시설, 시간연장보육시설, 방과후보육의 4종의 취약보육에 대하여 인건비(수당)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4점 만점에 2.34점에서 2.85점 사이에 분포하는데 장애아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시간연장형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유사하게 높고 그 다음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며 가장 낮은 것은 방과후 보육시설이었다. 취약보육 유형 모두 인건비 지원 점수가 운영비 지원 점수보다 다소 높았다. 조정점수는 최고 2.04점이다(표 8 참조).

이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세부사업을 하나 고르도록 한 조사에서는 1위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28.9%이고 2위는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23.6%이고 3순위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4.7%를 차지하며, 4순위는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10.2%이다.

6) 평가인증 관련 지원

평가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환경개선비 지원, 장비비 기자재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수당 지원, 시설장 수당 지원, 종사자 교통비 지원, 종사자 교육 연수 비용 지원,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기타 운영비 인센티브 지원, 평가인증 조력자 수당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4점 만점에 2.35점에서 3.05점 사이에 분포한다. 점수가 높은 순서는 보육교사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등이고 점수가 낮은 것은 시설장 수당이고 그 다음은 종사자 교통비, 차량운영비, 조력비 지원 등이다. 영역 가중치로 조정하면 최고점은 교사수당으로 2.10점이다(표 9 참조).

이러한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는 1위가 보육교사 수당 지원으로 36.6%이고 2위는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으로 21.7%이다. 이외는 모두 10% 미만이다.

〈 표 8 〉 취약보육 운영 지원 사업 필요성 4점 척도와 우선순위 백분율

단위: 점, %(명)

구분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보육		방과후보육		계	(수)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필요성												
평균	2.85	2.74	2.85	2.69	2.62	2.48	2.84	2.71	2.42	2.34	-	-
조정점수	2.04	1.97	2.04	1.93	1.88	1.78	2.04	1.94	1.74	1.68	-	-
우선순위 백분율	23.6	7.6	10.2	4.0	4.4	1.8	28.9	14.7	3.6	1.3	100.0	(2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 표 9 〉 평가인증시설 지원 사업 필요성 4점 척도와 우선순위 백분율

단위: 점, %(명)

구분	환경 개선	장비 기자재	교재 교구	냉난방	차량 운영	보육 교사 수당	시설장 수당	교사 교통비	교사 교육, 연수	평가 인증 수수료	기타 운영 인센 티브	조력자 수당	계	(수)
필요성														
평균	2.77	2.61	2.71	2.46	2.44	3.05	2.35	2.39	2.69	2.50	2.63	2.45	-	-
조정점수	1.91	1.80	1.87	1.70	1.68	2.10	1.62	1.65	1.86	1.73	1.81	1.69	-	-
우선순위 백분율	21.7	3.4	6.4	2.1	3.0	36.6		1.3	8.5	4.3	9.4	3.4	100.0	(2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7)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들이 응답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공립시설 확충, 공립시설 증개축, 공립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 민간시설 증개축/ 민간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육아지원기관(영유아플라자) 설치,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의 필요성은 4점 만점에 2.22점에서 3.07점 사이에 분포한다. 최고는 공립시설 확충과 공립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이며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민간시설 증개축이다. 영역 가중치를 주면 최고 2.06점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는 1위가 공립시설 확충으로 다수인 40.2%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선택하였고, 다음이 공립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으로 15.6%이며 3위는 육아지원기관 설치이며 4위는 민간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지원으로 10% 수준이다.

〈 표 10 〉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필요성 4점 척도와 우선순위 백분율

단위: 점, %(명)

구분	공립시설 확충	공립시설 증개축	공립 시설 환경개선	민간 시설 증개축	민간 시설 환경개선	보육정보 센터 설치	육아지원 기관 설치	장난감 대여점 설치	계	(수)
필요성										
평균	3.06	2.98	3.07	2.22	2.49	2.80	2.81	2.83	-	-
조정점수	2.06	2.00	2.06	1.49	1.67	1.88	1.89	1.90	-	-
우선순위 백분율	40.2	5.4	15.6	2.7	10.7	8.9	12.5	4.0	100.0	(2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8)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교재교구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영아 간식비 지원, 유아 간식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 기타 포괄적 운영비 지원 등으로 나누어 10개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필요성은 1.97점에서 2.72점 사이에 분포한다. 최고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과 교재교구비 지원이고 점수가 낮은 세부사업은 포괄적 지원, 공공요금 지원 등이다. 가중치를 적용하면 1.20~1.66점 사이에 분포하여 운영비 영역 세부과제의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음을 나타낸다(표 11 참조).

이러한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는 1위가 친환경 급식비 지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다음이 교재교구비 지원 18.1%이며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5.0%, 차량 운영비 지원 12.4%,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11.1%, 냉난방비 지원 10.6% 순이다. 지방정부가 많이 지원하는 간식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게 나타났다.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먼저 66개 세부과제의 상위 10%인 11개 과제는 양육수당, 출산수당,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보육인력 근속수당 지원,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등의 순이다(표 12 참조).

다음으로 하위 11대 과제는 공공요금 지원, 기타 포괄적 운영비 지원,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무원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 증개축 등이다(표 12 참조).

우선과제는 부모 지원, 교사 등 인력 지원, 공공보육시설, 특수보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보육정책의 재정투자가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부수적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필요성 우선순위가 약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에서 나타난 정책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표 11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필요성 4점 척도 및 우선순위 백분율 분포

단위: %(명)

구분	교재 교구비	냉난 방비	영아 간식비	유아 간식비	친환경 급식비	차량 운영비	아동 상해 보험료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공공 요금 지원	기타 포괄적 운영비	계	(수)
필요성												
평균	2.71	2.61	2.47	2.52	2.72	2.63	2.65	2.53	2.10	1.97		-
조정점수	1.65	1.59	1.51	1.54	1.66	1.60	1.62	1.54	1.28	1.20		-
우선순위 백분율	18.1	10.6	3.5	3.5	24.3	12.4	15.0	11.1	-	1.3	100.0	(2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 표 12 〉 우선순위 상하위 11대 세부과제

단위: 점

상위 11대 세부과제			하위 11대 세부과제		
세부과제	평균	조정점수	세부과제	평균	조정점수
양육수당	3.14	2.42	현장학습비 지원	2.28	1.60
출산수당	2.94	2.26	냉난방비 지원	2.61	1.59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3.22	2.25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해당시)	2.45	1.57
근속수당 지원	3.09	2.22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2.53	1.54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3.07	2.15	유아 간식비 지원	2.52	1.54
보육교사 수당 지원	3.05	2.10	영아 간식비 지원	2.47	1.51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3.00	2.10	민간시설 증개축	2.22	1.49
공립시설 환경개선	3.07	2.06	사무원 인건비 지원	2.24	1.44
공립시설 확충	3.06	2.06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2.11	1.36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2.85	2.04	기타 포괄적 운영비 지원	2.10	1.28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2.85	2.04	공공요금 지원	1.97	1.20

첫째, 지방정부간의 특수시책 예산의 차이가 매우 큰데, 이러한 차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방시대에 이러한 결정적 차이 조정은 중앙정부의 중요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하나로 양육수당이나 출산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양육수당제도는 보육시설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대체적 성격이 강한데, 보편적 수당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일반 보육료 추가 지원보다는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가족 등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에 대한 수당의 지원에도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육교사 근속수당이나 평가인증과 연계한 보육교사 수당 등은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보육료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들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전면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아동 간식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 부가적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비용 중 상당부분은 표준보육단가에 반영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민간시설 우위 상태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